

2003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방향

김 진 영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장

I. 서 론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의 55%가 집중되어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새정부에서는 지방의 자생적 경제기반의 확충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지역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지역균형개발의 최우선인 정부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보유자원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가가치와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산업을 특성화하여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의 개발요구에 부응하면서 한정된 재원의 적정한 배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당위성이 주어지고 있다.

II. 지역균형발전의 추진방향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상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개발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지역의 균형개

<표 1> 오지·도서종합개발 기본계획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기 간	· '00~'04(5년간)	· '98~'07(10년간)
대 상	· 399개 오지면	· 410개도서
사업량	· 5,878건	· 3,475건
사업비	· 8,018억원(양여금 5,613, 지방비 2,405)	· 9,683억원(국비 6,343, 지방비 2,723, 민·용자등 617)

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올해의 지역개발 관련시책사업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오지·도서지역종합개발사업

가. 현황 및 실태

정부에서는 산간·오지, 도서·낙도 등 낙후·소외지역에 대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오지개발촉진법(법률 제4060호, '83.12.31제정)」과 「도서개발촉진법(법률 제3923호, '86.12.31 제정)」을 제정하고 중장기계획에 의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0년부터 '99년까지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10개년계획사업을 완료후 법개정을 통한 한시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2004년까지 2차 5개년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서종합개발사업은 '97년도에 1차 10개년계획이

완료되어 '98년부터 2차계획에 의거 2007년까지 향후 10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개발정책이 수혜도가 적은 낙후·소외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 집중지원, 투자하는 경향이 있어 오지·도서 등 소외지역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오지지역주민들은 “국가정책의 시혜를 비교적 덜 받는 지역”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개발이 낙후된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획기적인 재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1) 오지종합개발사업 ('90~2002)

오지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총 연장 5,747km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9,723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의 생활편의를 제공하였고, 소류지·저온저장고 등 생산기반시설에 총 1,631억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 취수원 확보 등 소득원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하수

<표 2> 오지·도서개발사업 추진실적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기 간	· '90~'02(13년간)	· '88~2002(15년간)
대 상	· 403개 오지면	· 449개도서
사 업 량	· 10,074건	· 5,851건
투자실적	· 13,430억원	· 19,485억원

구정비 136km, 마을회관 743동, 소하천정비 335건 등 문화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생활안전시설 정비확충에 2,076억원을 투자,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투자재원(면당 20억원)으로 오지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지역별 특성개발이 다소 미흡한 면이 있고 또한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위주의 사업추진으로 문화복지사업분야에 대한 투자실적이 저조(전체사업비 13,430억원중 661억원 투자, 4.9%)하였던 것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중점지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개발수요를 감안한 사업비의 배정등도 향후 사업추진시 보완·개선할 과제이다.

2) 도서종합개발사업 ('88~2002)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사업은 전국 449개 개발대상도서에 대하여 '88년부터 2002년까지 1조 9,485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환경복지시설 등 5,85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생활기반시설 39%, 생산기반시설 47%, 환경개선시설 등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별 주요내용은 선착장, 물양장, 도로개설 등 도서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위주의 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문화·복지분야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추진성으로 급수·도로 등 생활기반시설 2,280건에 9,149억원, 물양장·방파제 등 생산기반시설 2,765건에 9,322억원 등을 투자하여 지리적으로 열악한 도서주민 288천 세대, 869천명에게 수혜를 주게 되었다.

다.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첫째,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의 마련이다.

오지·도서개발사업은 소외·낙후지역의 생활편의시설 확충 측면에서는 다소 기여하였으나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의 낙후성 탈피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개발지표 및 개발수준 등을 다시 측정하여 사업대상지역의 재조정 및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낙후지역의 특성을 살린 개발전략을 재정립하는 한편,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추진 방법의 개선이다.

오지개발사업의 경우 오지면수에 따라 지방양여금의 일률적 배분형식에 의한 현재의 투자방법을 지양하고 면수의 비율과 낙후정도 및 개발수요 등을 감안한 개발잠재력, 자치단체의 재정역지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대상지역별 2~3년내 완료 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거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재정 투자의 확대를 통한 개발성과를 가시화 하여야 한다.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오지·도서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았지만 타지역 수준의 종합적인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욱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오지개발사업비 확충은 지방양여금에 의한 배분기준 등의 인상 등 법 개정사항이지만 사업비 확충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낙후·소외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흡족할만한 수준의 투자는 지방재정 실정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가급적 중앙정부의 국비 등 지원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민·용자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관련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다.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개발사업을 '90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수준이 현저히 낙후된 실정임을 감안하여 2004년까지 한시법인 오지개발촉진법의 시한 철폐 또는 시한연장을 통하여 낙후된 오지지역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 2003 사업계획

금년도의 오지개발사업은 제2차5개년('00~'04)계획의 2003년도 대상사업을 우선하되 지역현안 및 주민숙원해결차원의 사업을 선정추진하고, 주민의 기초적 생활수요 충족을 위한 생산·소득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함으로써 사업의 내실화 및 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며, 도서개발사업은 제2차 10개년('98~2007)계획중 6년차에 접어들었으며, 주로 생산소득기반시설 위주의 집중투자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금년에는 243억원을 여수(금오도~안도) 등 연도·연육교건설(시범)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도 오지·도서개발사업에 총 1,747건 3,303억원으로 작년대비 12.8% 증액되었으며, 오지면당 8.9억원, 도서당 2.9억원씩 평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3. 지방도로의 정비사업

가. 현황 및 실태

지방도로의 종류는 도로법에 의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도

<표 3> 2003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구 분	오지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대 상	· 233개 오지면	· 410개 도서
사 업 량	· 1,347건	· 400건
사 업 비	· 2,089억원(양여금 1,462, 지방비 627)	· 1,214억원(국비 850, 지방비 364)

로 분류되며,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는 이동성을 중시하는 간선 및 보조간선기능의 역할을, 시·군·구도는 이동성보다는 접근성을 중시하는 집산·국지도로의 역할을 하는 도로이고 농어촌도로는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농사용도로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를 말한다.

2001년 12월을 기준으로 광역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연장은 12,439km에 이르고 포장률은 63.4%이며, 광역시도 중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전체의 약 26.1%에 이르고 있어 지방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은 수준이지만 폭증하는 도시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도는 지방간선도로망을 대표하는 도로로서 총연장은 15,608km에 이르고 포장률은 80.5%이며,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전체 포장도의 약 8.2%에 불과하고 대부분 2차선도로로 간선도로망으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12월 국가지원지방도가 새로 도입되었는데 이 도로는 중요도시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며 국도와 함께 국가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되며 2001년 12월 현재 국가지원지방도는 3,580km에 포장률은

79.8%에 이르고 있다.

시도는 '95년 도농복합형시의 설치에 따라 동지역 시도와 읍면지역 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1년 12월 현재 총연장은 28,258km에 포장률은 58.6%이나 2차선이하의 도로가 전체 포장도 연장의 72.4%나 되고 있어 지방중소도시의 도로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군도는 총연장 15,605km에 포장률은 46.7%로 미포장연장이 8,315km에 이르고 있으며 포장도중 2차선이하의 도로가 전체의 99.5%를 차지하고, 이중 도로의 기능이 부족한 도로가 14%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91년 12월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총 47,073km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였으나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도로 등급조정시 군도이상 상위도로 승격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도로 15,325km를 추가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2001년 말 현재 총 23,365개 노선 62,398km이며, 2001년 12월까지 16,826km를 정비하여 포장률이 27.0%에 이르고 있다.

나.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1990년 12월 지방양여금법 제정 이후

1991년~2002년까지의 지방도로 정비실적(2차선 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은 25,551km(사업비 27조 7,989억원)로 연평균 2,129km를 정비하였으며 2002년말 현재 지방도로의 총연장 134,308km 중 62,272km가 포장되어 46.2%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어 지방양여금 제도 도입이후 지방도로 포장률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포장률 47~48%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포장대상 연장의 증가, 도로등급의 조정 등 이유가 있지만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탓도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앞으로는 기존의 투자 방법에서 탈피, 국가기간 도로망과 연계한 지방도로망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물류비용 최소화 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자동차의 증가가 한계점에 도달한 선진외국의 경우는 시설의 효율성 증대가 정책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경우는 앞으로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교통애로 해소 효과가 가장 큰 시설확충이 최우선 정책과제일 수 밖에 없고

※ 4차선 건설시 2차선도로에 비해 교통량 처리능력은 약 400% 이상증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애로구간의 해소와 함께 도로망의 효율을 근본적으로 제고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도로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로, 현재의 많은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이므로 도로의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면 시설기능이 약 20~30%증가가 가능하므로 기존 시설의 운용효율 증대는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므로 기존도로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해야 한다.

셋째는 교통안전에 위해 도로의 계획, 건설, 유지관리 단계마다 안전 개념을 도입하고 선진국 수준의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넷째는 도로수요를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수요관리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높이는 반면에 자동차의 대당 운행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버스전용차로제의 실시와 주행세 도입 등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도로시설이 확충되도록 함으로서 조세형평성과 자동차운행 억제효과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다.

다섯째, 21세기에는 통일된 국가로서 동북아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남한지역에 기수립된 도로망계획이 북한지역과 연결되는 남북한의 종합도로망 계획을 완성하고 남한은 국토간선골격망(7×9), 국도망조정, 지방도로망조정계획이 완성단계인 반면, 북측은 일제시대에 구축된 철도중심의 교통망으로 도로망이 절대 취약하므로 서해안축, 동해안축 등 남북연결 골격망을 중국대륙, 러시아대륙과의 연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2003 지방도로별 추진계획>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전체연장	2002까지 포장실적	포장률 (%)	2003 계 획				포장률(%) (’02→’03)
				사업량	사 업 비			
					계	양여금	지방비	
계	134,281	62,224	46.3	1,310	29,116	19,379	9,737	46.3→47.1
광역시도	12,439	7,908	63.6	31	6,402	3,201	3,201	63.6→63.8
지 방 도	15,578	12,602	80.9	160	5,928	3,557	2,371	80.9→81.5
군 도	15,594	7,498	48.1	273	4,002	3,201	801	48.1→49.0
시 도	28,292	16,864	59.6	227	7,855	5,158	2,697	59.6→60.2
농어촌도	62,378	17,352	27.8	619	4,929	4,262	667	27.8→28.8

라. 2003 사업계획

금년도 지방도로사업은 그간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비포장도로의 2차선 확·포장사업과 병행하면서 교통정체 해소 및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중점 투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으로 총 2조 9,116억원을 투자 1,310km를 정비하여 포장률을 47%까지 높

일 계획이며, 특히 광역시와 일반시 등의 극심한 도심지 교통난 완화를 위해 총 1조 1,331억원을 투자, 650km의 도로를 개설하고, 지방도·군도상의 4차선 확·포장, 읍·면 우회도로, 장대교가설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총 5,558억원을 투자, 191km를 정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소통원활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도로별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2003지방도·군도 교통소통대책사업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지 방 도			군 도		
	개 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개 소	사업량	사업비 (양여금)
계	132	62.9	3,557 (2,134)	300	195.4	3,112 (2,490)
4차선확장	39	32.4	1,780	17	14.1	348
위험교량재가설	40	2.5	439	86	3.4	672
읍·면우회도로	15	5.7	251	14	8.5	172
장대교·터널가설	23	2.4	674	18	1.4	326
재포장 등	15	19.9	413	165	168.0	1,594

<자전거이용시설정비 제1차 5개년('08~'02)사업 추진현황>

(금액:억원)

구 분	사 업 비	사 업 량		
		자전거도로	보 관 대	횡단보도턱 정 비
사업규모	4,789	4,419km	190천대분	37천개소

※ 전국 자전거이용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6,524km, 보관대 360천대분

4.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가. 현황 및 실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심각한 도시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등 근검절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93년부터 행정자치부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95.1.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자전거도로·주차장 등 관련시설의 체계적 정비와 자전거 통행방법, 안전문제 등 자전거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전거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보관대 등 이용시설의 체계적 정비 및 자전거 타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존 횡단보도턱 정비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9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나.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그동안 '98~'02년까지 제1차 5개년 기간 동안 총 4,789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4,419km와 190천대분의 자전거 보관대, 37

천개소의 횡단보도턱 등 자전거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시설을 정비하였다.

또한 잠재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수요를 유발하고 자전거 타기 생활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 대행진”, “국토순례” 등 시민·단체·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행사와 시민토론회·홍보책자 발간·배포, 대국민 홍보·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당초에는 2% 수준을 밀돌던 시범도시의 경우 상주 18.6%, 남원 12%, 전주 4.5%, 경주 5.3% 등으로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급격히 신장하는 등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전국 13,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85%가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며 91%가 자전거 이용시설이 완비되면 자전거를 타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의 자전거 이용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전환 등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있다.

첫째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절대부족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완전히 정착되기 위하여는 자전거 도로·보관대, 고가·지하차도의 연속 경사시설, 정보제공시설 등 관련시설이 완비되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신속성·편리성·경제성 등이 보장되어야 하나 우리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자전거 이용시설이나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실정에 있어 자전거 타기 생활화가 일정한 궤도에 오를때까지는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만 하겠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에 있어서 제2차 5개년('03~'07)간 국가지원아래 자전거이용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신개발도시, 관광·사적지, 교육·공업도시와 같은 중소시범도시를 중심으로 통근·통학로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결노선, 시장·백화점 등 생활권 중심의 다중이용시설과, 자전거이용도가 높은 학교·공공기관·산업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기관과 집단주거지역간 연계노선 및 시범노선 등을 선정, 자전거 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자전거타기생활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자전거이용 여건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전거 이용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 주·정차나 노상적치물 등 각종 장애물이 상존해 있고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에 있어서도 보도에서의 자전거 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

례법상 자전거 이용자가 일방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차도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속도제한 미흡, 자동차주행시 보행자에 대한 보호조항은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항이 없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크게 미흡하여 자전거 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강화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문제이다.

'93년부터 행정자치부가 주요시책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그동안 지자체와 국민들이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의 교통정책이 지나치게 자동차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 보다는 레저·스포츠용으로 인식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추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관련부처의 인식부족, 협조체계 미흡등으로 자전거 이용이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교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조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및 관심유발,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캠페인의 지속적인 전개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을 크게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다.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에서 기술한 단기적 대책외에도, 장기

적으로 여러분야에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자전거이용시설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직접투자 외에도 각종 도시계획이나 택지·공업·관광단지조성, 공공도로의 개설시에는 계획단계부터 자전거도로·보관대를 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각급 자치단체, 기업, 학교 등 대표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공직자·근로자·학생들이 적극 동참해 오도록 슬선수범해 나가야 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2조에 근거한 자전거 등록제 실시는 자전거 도난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자전거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자전거 이용 호응도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자전거 관련업무 전담공무원 확보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쾌적한 자전거 주행환경조성 및 편의시설 확충, 자전거관련 민간단체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이다.

특히, 2010년까지 자전거교통수송 부담율을 '97년말 현재 1.8%에서 10%까지 제고시키기 위하여 2002년까지 1단계 기간동안에만 7천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이의 30%인 2천억원(매년 400억원)정도를 중앙에서 지원하여야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으나 '98년에 194억원, '99년에 350억

원, 2000년 250억원, 2001년 270억원, 2002년에 370억원으로 사업초기 단계에서의 국가지원이 미흡한 실정에 있어 앞으로 국비나 특별교부세 등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겠으며, 아울러 지방비 투자 확대 방안도 강구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겠다.

라. 2003 사업계획

총 600억원(국비 200, 교부세 100, 지방비 300)을 투자,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읍·면동장, 시민대표,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모제를 통하여 자전거이용 잠재력이 높고 큰 시범도시와 비시범도시의 시범기관·시범노선을 선정, 집중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540km, 자전거보관대 43천대분, 횡단보도턱 5천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아울러 정부기관, 지자체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타기 대행진, 국민토론회 등 각종 이벤트 추진, 각 언론기관을 통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홍보방영, 자전거 전용거리지정, 자전거타기봄 조성 및 자전거이용 공공기관 방문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5.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

가. 현황 및 실태

최근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국도 및 지방도로상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2003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규모>

(금액:억원)

단 위 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교 부 세	지방비
합 계		600	200	100	300
자전거 도 로 (km)	540	540	180	90	270
보관대 (천대분)	43	30	10	5	15
보도턱 (개소)	500	30	10	5	15

<사업추진 실적>

세부단위사업	사 업 량(m)				재 원 계 획(백만원)				
	총계획	'01이전	'02년도	향 후 계 획	총계획	기 투 자 액			향후계획
						소 계	'01이전	'02년도	
농기계 안전운행 도로 설치사업	65,545	-	6,110	59,435	45,000	5,000 (3,500)	5,000 (3,500)	5,000 (3,500)	40,000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00년도 경운기 교통사고 : 1,956건 발생, 사망 183명, 부상 2,516명

따라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사업을 2002년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전국적으로 국도나 지방도로상에 서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노선을 일제조사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기계 전용도로를 개설하거나 농기계 횡단구조물 을 설치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나. 그간의 투자실태 및 평가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에 의거 사업추진 원년인 2002년에 총 50억원(교부세 35, 지방비 15)을 투자, 전용도로 9개노선 6km와 횡단구조물 5개소 130m를 설치하였으며, 세부 추진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자치단체별 사업실적>

구 분		계 (노선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전용도로(m)	5,980 (9)	900 (2)	-	1,800 (1)	650 (2)	530 (1)	730 (1)	700 (1)	500 (-)	200 (1)
	횡단구조물 (개소)	130 (5)		45 (2)	-	-	30 (1)	25 (1)	-	30 (1)	-
사업비 (백만원)	계	5,0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200
	교부세(70%)	3,50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420	140
	지방비(30%)	1,50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180	60

※ ()는 노선수임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은 도로상에서의 빈번한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임으로써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편리한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02년에 시범적으로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전용도로 9개노선과 농기계가 도로를 평면으로 횡단하지 않고 통로박스를 이용하여 횡단하도록 5개의 횡단구조물을 설치하여 총 3,780가구 10,869명의 농민들이 교통사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영농기반을 구축하여 많은 농민들이 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다. 向後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설치사업은 WTO 체제하에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날로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한 영농기

반 구축으로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02년에는 시범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노선을 선정하여 소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국 도로상에서의 농기계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한편, 우리나라 농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6. 소규모 소방·안전도로개설

가. 현황 및 실태

현행 도로법상 도로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로는 지방양여금법에 의하여 지방양여금을 지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시의 구도는 지방양여금 지원대상에서

<소방안전도로 연차별 사업계획('02~'06)>

구 분		전체계획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사업량	노선수	143	28	32	31	26	26
	연장(km)	27.3	3.2	5.8	5.5	5.7	7.1
사업비(억원)		1,400	200	300	300	300	300

제외되어 있어 자체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형편상 소규모 투자에 그치고 있어 도로개설률이 다른도로에 비하여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방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화재 및 응급환자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량의 진입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소방·안전도로개설을 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교부세를 지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화재 등의 응급상황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나. 그간의 추진실적 및 평가

전국 6개 광역시의 미개설된 구도중 폭 12m미만의 소로급 도로를 대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안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소방·안전도로 개설사업은 자치단체로부터 사업수요 조사결과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주

민이용도 및 소방·안전사고 예방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총 143개노선 27.3km를 선정하여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개년간 총 1,400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사업추진 원년인 금년에는 사업효과가 가장 큰 28개노선 3.2km를 시범노선으로 선정하여 교부세 100억원 등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 한편 도심지 주거지역내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시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다. 向後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도심지내 미개설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화재 및 응급상황 발생시 소방·구급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소방안전도로 개설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그동안 투자재원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진 광역시내 구도의 정비율을 크게 높이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조기개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할 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76~'02)>

(단위:억원)

구 분	주 택 개 량		마 을 정 비		빈 집 정 비	
	동수(동)	사업비	마을수	사업비	동수(동)	사업비
전체계획	504,705	63,997	8,498	15,768	77,125	240
추진실적 ('76 ~ '02)	361,450	35,346	6,080	5,653	40,837	131
향후계획 (2003~2008)	143,255	28,651	2,418	10,115	36,288	109
※ 2003추진	9,500	1,900	194	1,064	6,680	20

있는 소규모 소방안전도로 개설사업은 정부차원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 사업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7. 주거환경개선사업

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1) 現況 및 實態

낡고 생활에 불편한 각종 주거시설의 개선을 통해 지역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60년대 후반 농어촌지붕개량사업에서 시작하여 '76년부터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을 현대식 문화주택으로 개량하고 사는데 불편한 마을 기반시설을 편리하게 고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발전 되었으며, '91년에는 마을단위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심화되고 있던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초기단계에서부터 예방하

는 등 생활편익과 환경이 조화된 종합적 농촌마을 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2)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지난 '76년부터 2002년까지 총 4조 1,130억원을 투자한 결과 361천동의 노후불량주택이 생활에 편리한 전원주택으로 개량됨을 비롯하여 894천가구가 입식부엌과 수세식화장실을 갖추게 되었고, 6,080개 마을의 안길이 확·포장되고 마을회관이 건립되어 주민 공동체의 삶이 한단계 향상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그동안 방치되어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장소로 이용되던 농촌빈집 41천동의 정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환경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95.12.29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하여 '96.7.1부터는 동법령의 제도적 뒷받침속에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으로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도시형

주거문화 생활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한정된 사업비로 다수지역에 소규모 분산지원함에 따른 투자효과의 저하, 지역별·마을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추진 등은 앞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평가된다.

3) 向後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전술한 바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2008년 12월에 일단 그 시효가 완료되고 마을하수도사업에 투자되는 농어촌특별세는 2004년까지만 운영되는 한시적 재원으로 현시점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2008년까지로 국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 2008년까지 총 2조 8,651억원을 투자하여 143천동의 주택을 개량하는 등 총 3조 8,8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코자하는 당초 사업목표의 달성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한시법인 농어촌주택개량법의 존치기한 연장, 농특세 재원의 대체 재원확보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수지역의 소규모분산투자에서 선택적 집중투자, 획일적 개발에서 특성화·차별화된 개발로 사업추진방향을 전환하고 사업추진에 적극적이고 창의적 Idea를 발휘하는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4) 2003 사업계획

2003년도에는 총 2,984억원의 예산을 확

보하여 9,500동의 불량주택 개량과 194지구의 하수도시설 및 마을의 기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특히 하수도법 개정(2001.3)으로 특정지역내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에 우선 167개지구에 141억원을 투자하여 시설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관련부처의 시책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나.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

1) 현황 및 실태

현재 전국 농어촌지역에 47천여개의 자연부락이 산재해 있고 370여만명의 농어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주여건이 상당수준 개선되고 도시수준에 못지않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등 성과도 없지 않았으나 콘크리트와 국적불명의 주택난립으로 농촌의 모습이 훼손되고 마을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사라진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색없는 마을로 변모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농촌의 모습이였다.

20세기 후반 강력하게 불어닥친 산업화 우선정책에 밀려 농촌의 중요성이 상당부분 퇴색하였으나 다양성과 환경이 중요시되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농촌은 농어민이 거주하면서 식량을 생산하던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건강한 생태와 자연환경이 살아 숨쉬는 국토의 중심공간으로, 도시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획	기 투 자 액			향후계획
		소 계	'01년 이전	'02년도	
계	23,000	9,000	2,700	6,300	14,000
'01 선정마을 (9개 마을)	9,000	5,400	2,700	2,700	3,600
'02 선정마을 (14개 마을)	14,000	3,600	-	3,600	10,400

※ 교부세 투자계획임.

생활에 지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체성을 잃어가는 어린이들에게 조상의 슬기로운 생활상을 전승해 주는 전통공간으로 그 기능이 다양화되고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라는 근로문화의 혁신적 제도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이즈음에는 건전여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행자부는 전통의 보존과 청정한 자연환경, 생태가 살아숨쉬는 농촌의 강점을 시대변화에 접목한 새로운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을 시책사업으로 발굴하여 2001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름이란 명칭은 우리말인 “한아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풍요롭고 공동체적인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가꾸고 정부와 관련 전문가가 주민들의 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소득과 환경이 조화되고 고유의 테마가 마

을별로 표출되는 새로운 형태의 농촌마을 개발사업 추진 목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01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지역개발·건축·환경·관광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개발 자문위원회에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1차년도 대상마을을 도별 1개마을씩 총 9개마을을 선정하며 있으며, 2002년에는 광역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시도별 1개마을씩 총 14개 마을을 대상마을로 선정하여 총 23개 마을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01~'02년까지 23개 마을에 총 90억원의 교부세를 투자하여 마을개발 세부용역 및 공공기반시설 정비, 소득원사업 등을 확충·정비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은 인공이가미되지 않은 자연의 푸른환경과 생태가

미래의 소중한 자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주택개량·마을안길정비 등 생활편익기반시설에 있어서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고 흙·돌등 자연소재를 적절히 활용하는 환경친화적 마인드로 무장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또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웃간 정이 살아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 재건을 위하여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면서 인심이 메마르지 않았던 옛적 고향농촌을 재건해 나가고 있다.

3) 向後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정부내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시대변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는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몇가지 점에서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사업추진의 주체를 관에서 주민자율로 전환하였다.

그동안의 사업추진은 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주민들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사업의 추진진도가 다소 빠르고 관에서 의도한 목적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효과는 있었지만 어느마을이나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민들은 정부지원의 타율성에 젖어 지원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마을별로 주민자율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공기반

시설 시군에서, 사유시설의 관리·보존등에 대하여는 주민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협약을 시군과 마을주민이 상호 체결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새로운 역동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여 사업효과가 배가되는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소규모 분산지원 방식에서 선택적 집중지원을 시도 하였다.

기존의 농촌마을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다수 마을에 대해 지원을 함에 따라 지원사업비가 소규모로 분산되어 사업비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개발잠재력이 높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의욕이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고 정부내 유관정책사업들의 연계 지원을 통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마을 개발사업에 도입하고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는 마케팅·이벤트·관광사업을 접목하였다.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궁극적 목표중 하나는 바로 농촌을 농촌답게 가꾸어 나가는 데 있다. 푸른환경과 건강한 생태, 전통문화가 조화된 농촌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농촌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사업은 자연친화적 소재와 방법을 채택하여 경관훼손을 최소화시키고 마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테마로 개발하여 이벤트화 함으로서 관광상품으로

<3개년 계획>

(단위:억원)

계		2001		2002		2003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496	16,000	283	4,000	136	6,000	77	6,000

연계하며, 생태·녹색관광과 체험관광을 접목하여 도농간 교류증진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의 추진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농촌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활기와 생동감 넘치는 농촌마을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4) 2003 사업계획

올해에는 2001년에 선정된 9개마을에 지원한 54억원외의 36억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종합평가할 계획이며, 2002년에 선정된 14개마을은 사업추진상황을 종합분석하여 하반기중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1) 현황 및 실태

60년대 후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인구 집중으로 도시 곳곳에 영세서민들이 밀집한 달동네가 형성되었고 도시 한가운데 집단적으로 형성된 달동네는 도시환경과 기능을 악화시키는 물론 영세서민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심화시키는 사회문제를

파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달동네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도시기능을 제고하고 서민들의 주거생활 편의 제공을 위하여 '89년 4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전국의 도시 달동네 613개소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 시설과 복지시설 등의 설치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그간의 투자실적 및 평가

'89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종료기간인 '99년까지 지속되었으나 재원부족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자 의원입법으로 임시조치법을 개정하여 2004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00.12.11 경제장관회의시 행자부와 건교부가 합동으로 '01년부터 '03년까지 3년간 1조 6천억원을 투자하여 조기완료키로 하였다.

3개년 계획에 따라 1차년도인 2001년도에는 4,000억원을 투자하여 283개 지구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자체, 주민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정부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지를 제고시

<4개년 계획>

(단위:억원)

구 분	계	2001	2002	2003	2004
당 초	16,000 (496)	4,000 (283)	6,000 (136)	6,000 (77)	-
변 경	16,000 (486)	4,000 (278)	3,682 (118)	3,040 (54)	5,278 (36)

※ ()는 사업지구수

켰다.

'01년에 이어 2002년도에는 6,000억원을 투자하여 324개 지구의 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02년 8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 피해에 따른 수해복구비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으로 국비 지원규모가 감액(3,000→1,640억원)되고 예산집행 부진으로 '03년도 예산마저 요구액 3,000억원중 1,500억원만 반영됨에 따라 3개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3개년 사업지구중 여건변동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구는 제외시키고 지구별 사업진도를 감안하여 당해연도 완공위주로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등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3개년사업을 4개년사업으로 변경하였다.

3)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전용 및 예산집행 부진등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일부 차질을 빚는 등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으나 사업지구 및 사업시행시기의 조정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유도해냈다.

한편 2002년 12월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합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중장기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여 미완료 지구 및 신규지구의 발굴로 지속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4) 2003 사업계획

올해에는 총 3,040억원을 투자 5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새로이 착수하고 2002년도 미완료지구의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 소도읍육성사업

1) 현황 및 실태

지방자치법 제3조에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 이상이 모여 사는 지역을 “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는 반경 1~1.5km 이내에 최소 1만명 내외의 인구가 모여 사는

<읍지역의 정주여건 비교>

구 분	도로	주차시설	광장	도시공원	시장	하천	하수도
전국평균 (%)	53.4	61.5	63.3	25.9	87.0	94.9	90.6
읍평균 (%)	32.4	37.3	33.9	7.6	72.0	80.3	48.6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대(가교지역) 역할을 하는 지역을 “소도읍”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읍(소도읍)은 도시와 농촌의 중간 완충역할을 하면서 배후 농어촌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중심 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다.

60년대 중반까지는 읍의 역할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발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산업화가 시작된 70년대 초부터는 도시의 비정상적 거대화에 밀려 읍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면서 읍지역은 급격히 그역할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읍지역의 기능회복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001.1.8)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읍지역과 도시계획구역 또는 3km² 면적 이내의 지역에 인구 3천명 이상이 모여 살거나 살것으로 예상되는 면지역을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하였는데 지난 2001.11월 1차로 지정·고시된 지방소도읍은 194개 지역으로 13,496km²의 면적(전체 국토면적의 14%)에 우리나라 총인구의 7%인 3,365천

명이 거주하고 있다.

2) 그간 투자실적 및 평가

지난 '72년 가로변 간판정비, 재래시장 환경정비 등 읍지역의 환경을 정비하는 “도읍가꾸기사업”에서 시작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소도읍개발사업”으로 확대된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2002년까지 총 9,9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4천여개소의 가로를 정비하는 등 총 92천여건의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도읍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배후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도시·농촌 우선정책에서 소외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만의 사업추진에 의존함으로써 읍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채 민원 해결 위주의 단순사업만 추진하게 되는 등 사업추진이 침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후 정부내 부처합의에 의한 시행령이 마련되어 2001.7.9부터 시행됨으로서 소도읍육성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 할수 있게 되는 등 획기적 전환이

<소도읍개발사업 투자현황('72~'02)>

(단위:억원)

사 업 명	총 계 획		'02까지 투자		향 후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사 업 량	사 업 비
소도읍육성사업	연 2,422개도읍 (194읍)	129,917	연 1,900개 도읍	9,917	연 522개 도읍 (194읍)	120,000

이루어 질수 있게 되었다.

3) 향후 투자방향 및 발전전략

인구과밀의 거대도시 확산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화된 것은 물론 수도권 과밀문제 해소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읍지역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01. 1. 8 읍지역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 향상,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공포되었고 법 제정을 계기로 2003년부터 우리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구현하고 투자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발전적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잠재력이 높은 거점읍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대상사업도 6~7개 분야로 집중하여 지역대표성이 있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 특화사업의 육성, 일일시장, 5일시장, 중심 상점가의 현대화·전문

화사업 지원, 쾌적한 생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인프라 확충, 전통문화와 역사자원의 복원·보존, 관광활성화사업 등에 집중 투자토록 하고

둘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전문가가 튼의 육성 콘텐츠를 테마로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한 육성계획을 복수로 공모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심의·자문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사, 대상사업과 지역등을 선정·지원하는 『상향식공모제』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며

셋째, 자치단체장의 책임성과 중앙지원을 연계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육성협약제도』를 도입, 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읍지역 육성협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약내용에 따라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하고 자치단체장이 책임 추진하게 되며 협약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투자효율성 및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4) 2003 사업계획

2003년 우리부 시책사업으로 소도읍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새롭게 마련

한 추진방안에 따라 지역의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14개 시범소도읍을 선정, 7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Ⅲ. 맺는말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오지 등 특수지역에 대한 지원과 도로개발·소도읍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올해의 사업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오지개발촉진법,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촌도로정비법, 소도읍육성지원법 등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년부터는 접경지역지원법('00.1 제정)에 의하여 접경지역종합계획이 마련되어 그동안 각종 통제와 규제로 낙후되어 왔던 접경지역에 대한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문화복지, 생활환경개선 등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2012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추진될 것이며, 또한 달동네 소방안전도로 개설, 농어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 문화·관광 기반정비사업 등 주민 수혜도가 큰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및 소득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낙후되어 열악한 입장에 있는 지역주민

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지역개발사업은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이나 소외된 계층의 생활편익을 다소 향상시켰다는 성과가 있지만 사업비의 안정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사업비 전액을 집중 투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기간이 장기화 되는 등의 아쉬운 면도 있다.

앞으로 해당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비의 확보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개발 재원으로서 지역의 개발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객관적인 투자효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공모제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역개발 사업의 접근방식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되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이 촉진되어져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단위도로사업의 경우 현행 지방단위도로 양여금 재원의 85.6%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세(14.2%) 및 농특세(전입액의 5/14)가 2003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지방단위도로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대체재원 마련이 필요한 바, 2003년에 폐

지예정인 교통세 및 농특세법을 연장하거나 국세중 재원의 신장성과 안전성이 있는 특별소비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 대체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을 앞당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

상시켜 나감으로써 국민이 국토의 어느곳에 살든지 국민 모두에게 교육, 의료서비스, 일자리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아무런 제약없이 균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모두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참모습'을 마련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일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